

방위산업 육성과 구조 개편



李在潤 / 中央大 경영학 교수
경영학 박사



기술개발, 경제, 전력 융합재 생산구조로서 방위산업의 구조개선 및 위상재정립을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세기적 변혁에 대응할수 있는 가치창출 비전과 정책수립을 대통령 주재하에 심의 할수 있는 범국가적 기구인 『기술·경제·안보위원회』의 창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재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경영상태 악화, 수출지원제도상의 문제, 정부조달제도의 문제, 전문계열화 문제, 기술개발부진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급변 하는 안보환경 즉 남북한의 평화 공존 및 공동생활권형성과 통일지향정책, 세계 4대 강국의 세력균형 및 견제를 위한 받침목의 역할로 주체적 안보역량배양, 군·관·민 연계에 의한 자주적 국방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방과 산업경제, 사회제도, 외교, 문화, 교육 등 여러분야 연계에 의한 통합안보능력 확보, 첨단기술 출현에 따른 4차원 전장에 적합한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급속한 발전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국방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경영상태 악화, 수출지원제도상의 문제, 정부조달제도의 문제, 전문계열화 문제, 기술개발부진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술개발, 경제, 전력 융합재 생산구조로서 방위산업의 구조개선 및 위상재정립을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세기적 변혁에 대응할수 있는 가치창출 비전과 정책수립을 대통령 주재하에 심의 할수 있는 범국가적 기구인 『기술·경제·안보위원회』의 창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방위산업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안보환경하에서의 국방가치 창출에 대한 장기비전 부재입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세계적인 군사기술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개념이 정립되어 이에따라 국가전략으로의 방위산업기술 개발전략이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핵심으로 재조명 되어야 할것입니다.

둘째, 총체적 국방가치창출을 위한 민수부문과 통합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국방자원으로 민수부문과 연계없이, 독자적인 방산건설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투자를 통해 최대의 방위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핵심부품의 개발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용기술의 개발과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민수부문과 연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이 취약합니다.

전략적 육성분야 및 목표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투입된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구축된 방위산업의 생산기반이 취약합니다.

그 결과 국제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으며, 국내시장의 수요충족으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나아가서 방산업체의 수지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방산업체들의 국방연구개발체제 미정착 문제입니다.

국방연구개발이 정부주도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업체들은 생산부문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축적이 미흡하였고, 또한 국산화율이 저조하고 아직까지 수입의존적인 생산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업체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장치가 부족합니다.

다섯째, 정부의 지원제도상의 문제와 방산업체의 기업이지 부족입니다.

수출지원제도상의 문제, 정부 조달계약제도의 문제로 업체의 방위산업 참여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 스스로도 정부의 비호속에서 피동적으로 지원 및 육성정책에만 기대하여 왔으며, 업체의 독자적인 경영합리화 노력, 장기적인 핵심기술 확보노력, 방산시장의 한계극복을 위한 수요창출 노력 등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해결 접근 방법으로 당면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업체에 계획생산체제의 보장 조치로 방산물자 중·장기 소요물량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 소요물량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고, 집행년도초 일괄계약 및 사전생산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계열화 정착으로 시설 중복투자 방지 및 설비의 적정규모를 유도하고, 전문기술 축적 및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연구개발 활성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 소요 예시제를 운영 (최소 15년)하고, 요구 성능 충족시 개발품 조달을 보장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업체와의 연구분야를 설정해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강화 (세제, 연구개발투자비 등)해야 합니다.

넷째, 방산업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수병행 생산/개발로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주력하며, 민수전문업체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방산수출 및 해외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주재하고 청와대 특보가 간사를 담당하는 『기술·경제·안보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주장합니다.

미래학자, 과학기술 예측 및 기획전문가, 경제전문가, 안보전문가, 방위산업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국방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교육부장관 등 행정부 각료로 구성되며, 『기술·경제·안보 위원회』가 담당할 역할을 살펴보면, 장기적 과학기술력 축적 자산화와, 민수산업과 방위산업의 통합 구조적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전과 정책 기조를 수립합니다.

한편 기존의 「사회간접자본확충위원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등을 흡수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경제·안보위원회』산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 대 효과 분석에서는 장기적 기술력 축적 자산화와 방위산업의 구조적 경쟁력과 고급전문인력 양성의 평가기법을 폭넓게 적용해야 됩니다. *